

STRATEGY 21

통권44호 Vol. 21, No.2, Winter 2018

해군력이 해양 영토분쟁의 해결에 미치는 영향*

한 증 환**

-
- I. 서론
 - II. 해양관할권 분쟁과 해군력의 개념에 대한 고찰
 - III. 해양관할권 분쟁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 IV. 해군력이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분쟁에 미치는 영향
 - V. 연구설계
 - VI. 연구결과
 - VII. 제한사항 및 결론
-

* 본 논문은 저자의 학위 논문 일부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 해군본부, 소령, 박사과정 수학생.

I. 서론

남중국해에서의 해양관할권 분쟁은 인접 국가들 간 첨예한 대립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상과 그에 따른 미-중 간 군사적 대결 가능성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2016년 국제사법재판소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에 대한 주장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해당 지역에 대한 주권(sovcreignty)과 주권적 권리(sovcreign right)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¹⁾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중국은 해군력을 이용한 무력사용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뿐만 아니라 실제 해양관할권 분쟁 지역에 해군함정을 파견하기도 했다.²⁾ 이에 대응하여 필리핀, 베트남을 포함한 남중국해 연안국들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과도한 영유권 주장을 견제하고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해군력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쟁해역 인근에 자국의 해군함정을 파견하는 것이다. 실제로, 1988년 3월 남중국해에 위치한 존슨 남 산호초(Johnson South Reef)를 둘러싼 갈등으로 중국과 베트남 양국은 해당 해역에 해군함정을 파견했고, 양국 해군 간 교전으로 인해 약 70여 명의 베트남 해군이 전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³⁾

남중국해의 정치·경제·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미국, 인도, 일본을 포함한 제3국들도 해군함정 파견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해역에서의 분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국제법에 근거한 평화적 해결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경우 1979년 이후 남중국해를 포함한 전 세계 해양을 대상으로 해양관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항해의 자유 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을 실시하고 있다.⁴⁾ 실제로, 2015년 10월 미 해군은 남중국해 인근에서 중국의 불법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1) "Beijing Rejects Tribunal's Ruling in South China Sea Case,"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6/jul/12/philippines-wins-south-china-sea-case-against-china/>(검색일: 2017. 7.16.).

2) David Gompert, *Sea Power and American Interests in the Western Pacific* (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2013), pp.5-6.

3) Clarence Bouchat, *Dangerous Ground: The Spratly Islands and U.S. Interests and Approaches* (Carlisl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and U.S. Army War College Press, 2013), p.12.

4) U.S. Department of Defense, "Freedom of Navigation (FON) Program," <http://policy.defense.gov/OSDP-Offices/FON/>(검색일: 2018. 5.29.).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 수비 압초(Subi reef) 근해에 해군함정을 파견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해군 역시 최신에 해군함정을 파견, 남중국해에서 양국 간 긴장이 증대되었고,⁵⁾ 남중국해를 둘러싼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해양을 둘러싼 관할권 분쟁은 국가안보 및 경제발전의 핵심 이슈로써 과거부터 존재했지만,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채택 이후 해양을 둘러싼 국가 간 불협화음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천연자원(석유, 천연가스 등) 및 어로 자원에 대한 급격한 수요에 따라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⁶⁾ 구체적으로, 전 세계 분쟁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인 ICOW(Issue Correlates of War) 데이터⁷⁾에 따르면, 1900년부터 2001년까지 발생한 분쟁 중 해양관할권 분쟁이 총 86건으로 35건의 육상 영토분쟁, 36건의 강 분쟁에 비해 2배 이상 발생빈도가 높았다.⁸⁾ 또한 육지 또는 강을 둘러싼 분쟁과 비교했을 때, 해양을 둘러싼 분쟁은 불확실한 경계선이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오스트롬(Ostrom)이 언급한 것처럼, 육지의 경우에는 특정국가 또는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경계설정이 가능한 반면, 비고정성(non-stationary) 자원, 특히 물을 둘러싼 갈등의 경우에는 정확한 경계선 설정이 거의 불가능하다.⁹⁾ 이러한 불확실성은 해양을 둘러싼 분쟁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따라서 해양관할권 분쟁 당사국 간 합의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1970~1982년까지 매년 약 8건의 해양관할권 분쟁이 당사국 간 합의에 의해 해결되었지만,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 공포 이후 해양관할권 분쟁 해결 건수는 매년 약 5건 정도 수준으로 감소되었다.¹⁰⁾

앞서 언급한 남중국해에서의 분쟁뿐만 아니라 포클랜드 전쟁(The Falklands

-
- 5) "Angry China Shadows U.S. Warship near Man-made Islands," [https://www.reuters.com/article/ us-southchinasea-usa/angry-china-shadows-u-s-warship-near-man-made-islands-idUSKCN0SK2AC20151027/](https://www.reuters.com/article/us-southchinasea-usa/angry-china-shadows-u-s-warship-near-man-made-islands-idUSKCN0SK2AC20151027/)(검색일: 2018. 7.16.).
- 6) Elizabeth Nyman, "Oceans of Conflict: Determining Potential Areas of Maritime Disputes," *SAIS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33, No.3(2013), pp.8-9.
- 7) ICOW 데이터는 국가 간 영토분쟁에 대한 database로, 영토분쟁의 정량적 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ICOW 데이터는 영토분쟁을 3가지 형태(해양, 육지, 강을 둘러싼 분쟁)로 구분하여 각 영토분쟁별 특징(분쟁 시작 년도, 평화적 해결 시도 횟수, 분쟁 해결 여부, 군사적 분쟁 여부 등)에 관련된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data.icow.org> 확인 가능하다.
- 8) 해당 수치는 ICOW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http://data.icow.org> 확인 가능하다.
- 9) Elinor Ostrom,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13.
- 10) John Donaldson and Alison Williams, "Understanding Maritime Jurisdictional Dispute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59, No.1(2005), p.141.

War, 아르헨티나 對 영국), 대구 전쟁(The Cod Wars, 아이슬란드 對 영국) 등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분쟁 당사국 해군 간 군사적 충돌은 과거부터 빈번히 발생해 왔다. 해양관할권 분쟁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분쟁 당사국이 분쟁 해역에 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 무력 현시 등과 같은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군력이 주요 수단이 된다는 것은 앞선 사례들이 보여 주듯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해양관할권 분쟁 당사국 간 평화적 해결 시도 시에도 해군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외교정책은 그 효과가 감소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군력이 해양관할권 분쟁의 관리, 특히 분쟁 당사국 간 군사적 분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해군력이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분쟁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이 이번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문제이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사례 연구 중심의 해양관할권 분쟁 연구와는 달리 ICOW 데이터를 활용하여 1900년에서 2001년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한 해양관할권 분쟁을 해군력이라는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해군력이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 번째로, 해양관할권 분쟁과 해군력의 개념을 설명한 후, 해양관할권 분쟁에 대한 기존 연구를 고찰할 것이다. 둘째, 세력전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군력이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분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한 후, 정량적 연구를 위한 연구설계와 통계분석을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를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의 결론과 제한사항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언급할 것이다.

Ⅱ. 해양관할권 분쟁과 해군력의 개념

1. 해양관할권 분쟁

해양관할권 분쟁의 정량적 연구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ICOW 데이터는 해양관할권 분쟁을 “해양의 사용(usage) 또는 접근(access)을 둘러싼 양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 간에 발생한 명백한 분쟁(explicit contention)으로, 국가를

공식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주체(official representatives)가 다른 국가가 관할하고 있거나 주장하는 해양 영역에 대해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를 주장할 경우 발생한다.”¹¹⁾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를 “공식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주체(official representatives)”란 국가를 합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개인(정치·군사 지도자 등) 또는 정부기관(외교부 등)이며, 개인·기업·반군 등과 같은 사적인 주체는 제외된다. 또한 “명백한 분쟁(explicit contention)”이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주체들에 의한 성명·발표 등을 포함하는 공식적이고 명확한 행위이며, 외교적 언사를 포함한 저강도 분쟁에서 양국 간 군사적 충돌의 고강도 분쟁까지 광범위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¹²⁾

ICOW 데이터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해양관할권 분쟁은 분쟁 당사국 간 특정 해양 영역에 대한 주권 또는 해양 영역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둘러싸고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발생하지만, 실제 해양관할권 분쟁은 정치·경제·전략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1950년대와 1970년대 사이에 발생한 영국과 아이슬란드 간 대구 전쟁(The Cods Wars)은 아이슬란드의 일방적인 배타적 경제수역 확장(1952년 4마일, 1958년 12마일, 1972년 50마일, 1975년 200마일)이 주요 원인이지만¹³⁾, 아이슬란드의 이러한 주장은 해당 해역 내 자원(어획량, 석유 등)과 밀접한 관련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간 암발랏(Ambalat) 해역을 둘러싼 분쟁 역시 해당 지역의 풍부한 자원뿐만 아니라 양국 간 중첩된 해양 경계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¹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해양관할권 분쟁은 분쟁 지역이 육상이 아니라 해양이다. 하지만 단순한 이 사실 자체가 해양관할권 분쟁을 육지 또는 강을 둘러싼 다른 형태의 분쟁과 구별되게 하는 중요한 특징이 된다. 클레인(Klein)이

11) Paul Hensel, Sara Mitchell, Thomas Sowers, and Clayton Thyne, “Bones of Contention: Comparing Territorial, Maritime, and River Issu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52, No.1(2008), p.128.

12) *op. cit.*, p.128.; Codebook for Maritime Claims Data Issue Correlates of War (ICOW) Project(2002), p.3.

13) Kelly Daniels and Sara Mitchell, “Bones of Democratic Contention: Maritime Disputes,”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Vol.20, No.4(2017), pp.296-298.

14) Stephen Druce and Efri Yoni Baikoeni, “Circumventing Conflict: The Indonesia-Malaysia Ambalat Block Dispute,” In Mikio Oishi(ed.) *Contemporary Conflicts in Southeast Asia* (New York: Springer, 2016), pp.138-146.; and Mark Valencia and Nazery Khalid, “The Sulawesi Sea Situation: Stage for Tension or Storm in a Teacup?,” *The Asia-Pacific Journal* (January 28, 2009), pp.1-4.

언급한 것처럼 영구적으로 점령·소유·통제가 가능한 육상과는 달리 해양은 특정 국가가 영구적으로 점령·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¹⁵⁾ 다시 말해서, 해양관할권 분쟁은 국가 간 해상 경계선 설정, 천연자원의 사용, 항행의 자유를 둘러싼 분쟁 등으로 발생하고, 이러한 원인들은 소유(occupation)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access)을 둘러싼 국가 간 의견 충돌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특정 지역에 대한 소유 또는 점령을 주목적으로 하는 육상 영토분쟁과는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해양관할권 분쟁만의 특징이다.¹⁶⁾ 또한 해상에서 경계선 설정을 위한 기준점 또는 주요 지형지물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과거부터 이러한 해양의 특성으로 인해 “해양은 육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¹⁷⁾

2. 해군력

해군력을 정의하기에 앞서 해양력의 개념부터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양력은 마한(Mahan)의 저서인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에서 최초 사용되었다. 하지만 당시 그는 해양력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해양력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를 위주로 설명하면서,¹⁸⁾ 해양력은 강대국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¹⁹⁾ 이후 해양력을 정의하는 여러 시도가 있었고, 대표적으로 모델스키(Modelski)와 톰슨(Thompson)은 광의의 개념에서 해양력은 해양의 사용과 통

15) Natalie Klein, *Maritime Security and the Law of the Se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13.

16) Paul Hensel and Sara Mitchell, “From Territorial Claims to Identity Claims: The Issue Correlates of War (ICOW) Project,”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34, No.2(2017), p.131.

17) James Kraska, *Maritime Power and the Law of the Se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108.

18) 해양력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는, 지리적 위치(geographical position), 지리적 특성(physical conformation), 영토의 크기(extent of territory), 인구수(number of population), 국민성(national character), 정부의 특징(character of government)이며, 자세한 내용은 Alfred Thayer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87), pp.25-89. 참고.

19) John Gooch, “Maritime Command: Mahan and Corbett,” In Colin Gray and Roger Barnett(ed.) *Seapower and Strategy* (Mary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9), pp.31-32.

제를 위한 수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²⁰⁾ 또한 이러한 수단은 해군과 같은 군사력 뿐만 아니라 해양과 관련된 민간분야도 포함한다고 언급했다.²¹⁾ 따라서, 단순히 말하면 해군력은 해양력의 군사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해군력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인 군사력 투사(power projection)의 개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군사력 투사란 특정 국가가 자국의 국경을 넘어 군사력을 전개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국가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왜냐하면 군사력 투사 없이 전쟁과 같은 공격적 외교정책 뿐만 아니라 협상과 같은 평화적 외교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²²⁾ 분쟁지역 자체가 본토로부터 이격되어 있고 해양으로 둘러싸인 해양관할권 분쟁의 특성을 고려하면 분쟁 당사국에게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외교정책 수행에 있어 군사력 투사능력은 필수적이다. 군사력 투사능력을 논함에 있어서 타 군과 비교할 때, 해군력은 자국의 국경을 넘어 타국에 대한 군사력 투사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형태이다. 따라서, 해양관할권 분쟁 당사국이 군사력 투사를 제한하는 해양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 즉 특정 수준 이상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외교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해군력을 정의함에 있어서 한 가지 더 고려할 사항은 모든 형태의 해군 플랫폼이 군사력 투사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많은 학자들이 주장했듯이 특정 배수톤수 이상의 주력 전투함이 군사력 투사를 위한 해군력의 핵심이다.²³⁾ 따라서, 모델스키(Modelski)와 톰슨(Thompson)의 정의를 바탕으로 이번 연구에서 해군력은 해양에 대한 접근(access)과 사용(usage)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력 투사능력으로 정의되며, 이는 해군 주력함에 기반을 둔다.

20) George Modelski and William Thompson, *Seapower in Global Politics, 1494-1993*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8), p.4.

21) Geoffrey Till, *Seapower: A Guid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2 edition)* (New York: Routledge, 2009), pp.20-23.

22) Jonathan Markowitz and Cristopher Fariss, "Going the Distance: The Price of Projecting Power,"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39, No.2(2013), pp.120-124.

23) Sean Bolks and Richard Stoll, "The Arms Acquisition Process: The Effect of Internal and External Constraints on Arms Race Dynamic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44, No.5(2000), pp.589.; and George Modelski and William Thompson, *op. cit.*, pp.28-49.

Ⅲ. 기존 연구 검토

역사적으로 영토 확장에 대한 욕구는 국가 간 전쟁 발발의 주요 원인이었고, 자연스럽게 영토분쟁은 국제정치학에서 국가 간 분쟁을 설명하는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²⁴⁾ 대표적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영토를 둘러싼 분쟁은 다른 문제들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보다 대규모 군사적 충돌(전쟁 등)로 발전된 가능성이 크고, 재발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분쟁의 강도 측면에서도 더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²⁵⁾ 해양관할권 분쟁은 육지를 둘러싼 영토분쟁에 비해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ICOW 데이터 등장 이후 해양관할권 분쟁에 대한 정량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번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쟁 당사국 간 군사적 분쟁을 포함한 해양관할권 분쟁의 관리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국제정치에서 체계(system) 차원의 요소들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구성주의(institutionalism)의 시각에서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국가 간 조약(international agreement), 세계적 차원의 민주주의 수준(systemic level of democracy)이 국가 간 해양을 둘러싼 군사적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것들이다.²⁶⁾ 대표적으로, 네메스 외(Nemeth et al.)의 연구는

24) Dominic Johnson and Monica Duffy Toft, "Grounds for War: The Evolution of Territorial Conflict," *International Security*, Vol.38(2013/14), pp.11-15.

25) Kalevi Hosti, *Peace and War: Armed Conflicts and International Order, 1648-198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and Paul Diehl, *A Road Map to War: Territorial Dimensions of International Conflicts* (Nashville: Vanderbilt University Press, 1999); and John Vasquez, *The War Puzzle Revisit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and Paul Senese, "Geographic Proximity and Issue Salience: The Effects on the Escalation of Militarized Conflict,"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15, No.2(1996), pp.133-161.

26) 대표적인 연구로는 Holley Hansen, Sara Mitchell and Stephen Nemeth, "IO Mediation of Interstate Conflicts: Moving beyond the Global versus Regional Dichotomy,"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52, No.2(2008); and Sara Mitchell and Paul Hensel,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Compliance with Agreement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51, No.4(2007); and Stephen Nemeth, Sara Mitchell, Elizabeth Nyman, and Paul Hensel, "Ruling the Sea: Managing Maritime Conflicts through UNCLOS and Exclusive Economic Zones,"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40, No.5(2014); and Andrew Owsiak and Sara Mitchell, "Conflict Management Regimes and the Management of Land, River, and Maritime Claims,"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2017) 등이 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이 새로운 해양관할권 분쟁의 발생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분쟁 당사국 간 군사적 분쟁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유엔 해양법 협약은 분쟁 당사국에게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 해양에서 경계선 설정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당사국 간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분쟁 당사국 간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절차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엔 해양법 협약 자체의 높은 수준의 제도화(institutionalized)·사법화(judicialized)된 특징이 분쟁 당사국 간 평화적 협상을 유도하기 때문에, 유엔 해양법 협약 가입국들은 기존의 해양 질서에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고 주장했다. ICOW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량적 연구결과는 분쟁 당사국 중 1개국 또는 양국 모두가 유엔 해양법 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분쟁 당사국 간 해양관할권 분쟁 발생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²⁷⁾ 크레센지(Crescenzi), 켈리(Kelly), 미셸(Mitchell)의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증가할수록 민주주의 국가 간 평화적 분쟁 해결 및 분쟁을 둘러싼 투명한 정보 공개 가능성이 증가하여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분쟁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²⁸⁾

해양관할권 분쟁에 대한 또 다른 연구 흐름은 분쟁 당사국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양관할권 분쟁의 중요성(issue salience)이 증가할수록,²⁹⁾ 동일한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싸고 과거 군사적 분쟁 경험이 있을 경우,³⁰⁾ 해양관할권 분쟁 지역 내 천연자원(석유 등)이 존재할 경우,³¹⁾ 해양관할권 분쟁 당사국이 경쟁(rivalry) 관계일 경우,³²⁾ 해양관할권 분쟁 당사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낮을 경우³³⁾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분쟁 가능성

27) Nemeth, Stephen, Sara Mitchell, Elizabeth A. Nyman, and Paul R. Hensel, *op. cit.*, pp.2-20.

28) Mark Crescenzi, Kelly Kadera, and Sara Mitchell, "A Supply Side Theory of Media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55, No.4(2011), pp.1069-1094.

29) Paul Hensel, Sara Mitchell, Thomas Sowers, and Clayton Thyne, *op. cit.*, pp.117-143.; and Paul Hensel, "Contentious Issues and World Politics: The Management of Territorial Claims in the Americas, 1816-1992,"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45(2001), pp.81-109.

30) Paul Hensel, Sara Mitchell, Thomas Sowers, and Clayton Thyne, *op. cit.*, pp.117-143.

31) Elizabeth Nyman, "Offshore Oil Development and Maritime Conflict in the 20th Century: A Statistical Analysis of International Trends," *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Vol.6(2015), pp.1-7.

32) David Lektzian, Brandon Prins, and Mark Souva, "Territory, River, and Maritime Claims in the Western Hemisphere: Regime type, Rivalry, and MIDs, 1901 to 2000,"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54, No.4(2010), pp.1073-1098.

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해양관할권 분쟁에 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해군력이라는 변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물론 기존 연구 중에서도 Composite Index of National Capability(CINC) 지표³⁴⁾를 바탕으로 분쟁 당사국 간 상대적 힘(relative power)의 차이가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연구도 있다.³⁵⁾ 하지만 분명한 것은 CINC 지표를 이용한 국력과 해군력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크리셔(Crisher)와 수바(Souva)가 주장한 것처럼 특정 국가의 풍부한 자원이 강력한 해군력 보유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독일과 소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 국가가 풍족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크리셔(Crisher)와 수바(Souva)는 그들의 연구에서 1865년부터 2001년까지 73개 국가의 해군함정 총 톤수와 CINC 지표 간 상관계수³⁶⁾를 확인한 결과 대략적으로 0.6 정도였고, 예상한 것보다는 낮은 수치였다.³⁷⁾ 또한 개별 국가의 해군함정 총 톤수와 CINC 지표 간 상관계수를 계산한 결과, 73개 국가 중 약 25%의 국가들에서 음의 상관관계(캐나다의 경우 -0.65), 다시 말해서 특정 국가의 자원이 풍족할수록(CINC 지표가 증가할수록) 해군력이 감소(해군함정 총 톤수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³⁸⁾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33) Paul Hensel, Sara Mitchell, Thomas Sowers, and Clayton Thyne, *op. cit.*, pp.117-143.

34) CINC 지표는 국가 간 협력에서부터 분쟁까지 국제정치에서 국가 간 다양한 행동을 정량적으로 연구함에 있어서 국력을 나타내는데 가장 흔히 사용되는 지표이며, 6가지 요소(국방비, 총 병력, 에너지 사용량, 철 생산량, 도시 인구수, 총 인구수)를 평균한 값이다. 자세한 내용은 David Singer, "Reconstructing the Correlates of War Dataset on Material Capabilities of States, 1816-1985,"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14(1987), pp.115-32. 참고.

35) CINC 지표를 이용하여 해양관할권 분쟁을 연구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Paul Hensel, Sara Mitchell, Thomas Sowers, and Clayton Thyne, *op. cit.*, pp.117-143.; and David Lektzian, Brandon Prins, and Mark Souva, *op. cit.*, pp.1073-1098.; and Stephen Nemeth, Sara Mitchell, Elizabeth Nyman, and Paul Hensel, *op. cit.*, pp.711-736. 가 있다.

36) 두 변수 간 연관성(association)에 대한 정도로 하나의 변수가 변화할 때 다른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상관계수는 -1~1까지 분포하며, 양의 상관계수는 하나의 변수가 증가할 때 나머지 변수도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자세한 내용은 Christopher Dougherty, *Introduction to Econometrics(4th e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22. 참고.

37) Brian Benjamin Crisher and Mark Souva, "Power at Sea: A Naval Power Dataset, 1865-2011,"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40(2015), pp.604-619.

38) 해당 수치는 저자가 크리셔(Crisher)와 수바(Souva)의 해군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1865년부터 2001년까지 73개 국가의 개별적인 상관계수를 계산한 결과이다.

CINC 지표와 해군력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잘 뒷받침해 준다. 나이만(Nyman)이 언급했듯이 해양관할권 분쟁의 관리에 있어 거의 모든 경우 분쟁 당사국의 해군력이 주된 수단이 된다.³⁹⁾ 따라서, 해양관할권 분쟁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해군력이 분쟁 관리를 위한 핵심 수단이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해군력을 중심으로 해양관할권 분쟁을 연구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

IV. 해군력이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분쟁에 미치는 영향

해군력이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앞서 “왜 해군력으로 해양관할권 분쟁을 분석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분쟁 지역이 해양이라는 사실 그 자체는 해양관할권 분쟁을 규정하는 중요한 특징일 뿐만 아니라,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국가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볼딩(Boulding)이 주장한 Loss of Strength Gradient⁴⁰⁾ 개념에서 나타나듯이 육상에서의 국가 간 분쟁은 양국 간 지리적 근접성(contiguity)이 군사력 투사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반면, 해양관할권 분쟁의 경우 지리적 근접성 뿐만 아니라 해양의 존재 그 자체가 국가의 군사력 투사능력을 제한하는 중요한 장애물이 된다.⁴¹⁾ 미어샤이머(Mearsheimer)가 언급한 “the stopping power of water” 개념, 즉 바다가 군사력 투사를 방해한다는 개념은 그가 언급했던 많은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개념은 바다가 가진 이중성(double-sidedness)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39) Elizabeth Nyman (2013), *op. cit.*, p.6.

40)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사력은 이동거리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는 것으로, Kenneth Boulding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이후 국가 간 군사적 분쟁을 연구한 많은 연구에서 지리적 근접성이 고려되도록 한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Loss of Strength Gradien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enneth Boulding, *Conflict and Defense: A General Theory* (New York: Harper and Bros., 1962) 참고.

41) John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orton, 2014), pp.114-119.

바다는 적절한 해군력을 갖추고 있을 경우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반면, 군사력 투사가 가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할 경우는 군사력 투사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군력은 군사력 투사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해양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적절한 수준의 해군력을 보유한 국가는 그 영향력을 조금 더 원거리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역사적으로도 볼 때에도 항공력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해양으로의 군사력 투사는 해군력이 유일한 수단이었으며, 심지어 현재에도 군사력 투사 수단으로써 해군력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⁴²⁾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육군의 경우 해군 플랫폼의 도움 없이는 해양 그 자체가 군사력 투사를 제한하기 때문에 군사력을 투사하기 어렵다. 또한 공군의 경우에도 제한된 작전시간과 반경으로 인해 해양관할권 분쟁에서 작전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직 해군력만이 분쟁 지역 자체가 육지(본토)에서 떨어져 있거나 분쟁 지역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관할권 분쟁에서 분쟁 당사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외교정책 수행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해양에서의 분쟁과 육지에서의 분쟁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콜벳(Corbett)이 언급한 것처럼 해양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분쟁 지역(해양) 자체의 특성과 그에 상응하는 작전 목표가 육지에서의 분쟁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무엇보다도 해양이라는 전장(battlefield)의 특성상 육지와는 달리 해양은 특정 국가에 의해 소유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해역의 정복 또는 소유가 해군작전의 목표가 될 수 없다.⁴³⁾ 또한 육지에서의 전쟁과는 달리 해전에서는 전선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고, 해양에서 전쟁은 기본적으로 3차원(공중, 수중, 수상)의 개념이다. 둘째, 작전적 측면에서 볼 때, 해전에서는 육지에서의 전쟁에서 적용되는 공격과 방어의 비율(3:1)이 다르게 적용된다. 왜냐하면 해상에서는 적을 발견하고, 적의 기동 방향을 예측하고, 손상된 해군함정을 대체 또는 복구하는 것이 매우 제한되기 때문이다.⁴⁴⁾ 또한 해양 자체의 특성은 상대방의 보복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해군력은 제한된 분쟁에 더 적합하다.⁴⁵⁾ 따라서 해양에서 발생하는 군사적 분쟁은 육지에서 발생하는 군사적 분쟁과는 성격이 다르고, 해군력이 기본이 되며, 이러한 해전이 특성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심각한 오류에

42) Sean Bolks and Richard Stoll, *op. cit.*, p.589.

43) Julian Corbett, *Some Princes of Maritime Strategy* (New York: Longmans, Green and Co., 1911), pp.88-90.

44) Geoffrey Till, *op. cit.*, p.44.

45) *Ibid.*, p.60.

직면하게 된다.⁴⁶⁾ 요컨대, 해양관할권 분쟁의 지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해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군력이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분쟁 당사국의 외교정책 수행에 핵심 수단이 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해군력이 해양관할권 분쟁에서 주요 수단이 된다면, 남은 의문은 해군력이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분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이다. 국가가 특정 이슈를 둘러싸고 외교정책을 결정하거나 실행함에 있어서 무엇을 고려하는가? 많은 요소들 중에서, 외교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라이케(Lykke)가 언급한 것처럼 군사전략은 목표(ends), 방법(ways), 수단(means)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목표(ends)란 최종상태 또는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고, 방법(ways)은 결과 달성을 위해 각종 수단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이며, 수단(means)은 결과 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능력 또는 자원 등을 의미한다.⁴⁷⁾ 이러한 세 가지 요소는 군사전략뿐만 아니라 국가의 외교정책 결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국가가 외교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요소는 반드시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가 무력을 이용한 공격(방법) 등으로 타국의 영토를 점령(목표)하기 원한다면, 해당 국가는 반드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력(수단)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나 클라우제비츠(Clausewitz)가 언급한 것처럼 전략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자원(수단)⁴⁸⁾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리델 하트(Liddell Hart) 역시 전략이란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자원을 분배하고 적용하는 술”⁴⁹⁾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 국가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필요한가는 해당 국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또는 방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클라우제비츠(Clausewitz)가 언급한 것처럼 수단 또는 능력이 목표 또는 방법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만

46) *Ibid.*, p.43.

47) Arthur Lykke, “Toward an Understanding of Military Strategy,” In Joseph Cerami and James Holcomb(ed.) *U.S. Army War College Guide to Strategy* (US Army War College Press, 2001), pp.179-184.

48) Carl von Clausewitz, *On War*. Edited and translated by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1832]), pp.194-197.

49) B. H. Liddell Hart, *Strategy*, Second Revised Edition (New York: Fredrick A. Praeger, 1967), p.335.

약 목표 또는 방법이 해당 국가가 보유한 수단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해당 국가는 외교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외교정책의 목표와 방법은 국가가 실제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군사·경제적 성장(능력)이 미국으로 하여금 공세적이며 확장적인 외교정책(방법)을 실행할 수 있게 했고, 미국의 영향력 역시 북미 대륙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목표)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⁵⁰⁾ 따라서, 국가가 특정 외교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해당 국가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요소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해군력은 해양관할권 분쟁의 핵심요소이다. 만약 분쟁 당사국이 본토로부터 떨어져 있는 해양관할권 분쟁 지역에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국가는 해양관할권 분쟁 해결하거나 자국의 목표 달성을 위해 무력의 사용 또는 협상 등과 같은 다양한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마코비츠(Markowitz)와 파리스(Fariss)는 군사력 투사 능력을 군사력 투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군사력 투사를 위한 비용이 감소할수록 국가들은 원거리로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⁵¹⁾ 다시 말해서 한 국가가 자국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군사력을 투사하고자 할 때, 이를 위한 제반 비용(경제적 손실, 병력의 손실 등)이 감소할수록, 해당 국가는 점차 원거리에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게 되고, 그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해양관할권 분쟁에 적용시켜 보면, 해양관할권 분쟁 당사국이 강한 해군력을 보유할수록 분쟁지역에 대한 군사력 투사비용은 감소된다. 왜냐하면 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전투력 손실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군사력 투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⁵²⁾ 다시 말해서 군사력 투사가 가능한 적정 수준 이상의 해군력을 보유한 해양관할권 분쟁 당사국은 본토에서 이격된 해양관할권 분쟁 지역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0) Douglas Lemke, *Regions of War and Pea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53.

51) Jonathan Markowitz and Cristopher Fariss, *op. cit.*, pp.123-127.

52) 여기서 말하는 군사력 투사비용의 감소는 군사력 확보 또는 유지에 소모되는 비용이 아니라 군사력 투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즉 병력의 손실 등을 의미한다. 이는 볼딩(Boulding)이 주장한 "Loss of Strength Gradient"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물론, 강한 해군력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것은 사실이나, 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게 되면 해양관할권 분쟁에서 군사력 투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병력·함정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보다 원거리로 군사력 투사가 가능해진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중국해군의 발전은 중국으로 하여금 남중국해나 서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원양에서 더 적극적인 해양 영유권 주장을 가능하게 했다.⁵³⁾ 예를 들면, 1992년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을 주장한 중국 영해법(Chinese Territorial Law of the Sea), 1992년 베트남에서 소유를 주장하던 다락 산호초(Da Lac Reef)에 대한 중국의 무력 점령, 1995년 필리핀에서 소유를 주장하던 미스치프 환초(Mischief Reef)에 대한 중국의 무력 점령, 그리고 최근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 등은 중국해군의 급격한 현대화와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⁵⁴⁾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인접국의 도전을 억제하기 위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해군의 정찰 또는 훈련 역시 중국해군 현대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⁵⁵⁾ 중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분쟁 당사국이 군사력 투사가 가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분쟁 지역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외교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크리셔(Crisher)는 군사력 투사가 가능한 해군력의 확보는 군사력 투자를 방해하는 해양의 존재를 극복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상호 이격된(non-contiguous) 국가 간 군사적 분쟁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⁵⁶⁾

여기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은 국가 간 군사적 분쟁은 결국 분쟁 당사국 간 작용(action) - 반작용(reaction)의 행위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만약 분쟁 당사국 중 어느 한쪽만 군사력 투사가 가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분쟁 당사국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한쪽 국가에서 군사력 투사가 가능한 해군력을 사용해도 다른 한쪽에서 대응 가능한 해군력이 없다면 해양에서 양국 간 군사적 분쟁이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분쟁 당사국 모두가 군사력 투사가 가능한 특정 수준 이상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분쟁 가능성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첫

53)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 -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Washington, D.C.: CRS, 2017), p.2.

54) Ian Storey and You Ji, "China's Aircraft Carrier Ambitions: Seeking the Truth from the Rumors," *Naval War College Review*, Vol.57, No.1(2004), pp.86-87.

55) Taylor Fravel, "China's Strategy in the South China Sea,"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33, No.3(2011), p.307.

56) Brian Benjamin Crisher, "Naval Power, Endogeneity, and Long Distance Disputes," *Research and Politics*, January-March(2017), pp.1-6.

번째 가설이 만들어진다.

가설 1: 분쟁 당사국 모두가 군사력 투사가 가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양국 간 군사적 분쟁 발생 횟수는 증가한다.

가설 1이 참이라는 가정하에, 분쟁 당사국이 군사력 투사가 가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경우 양국 간 군사적 분쟁 발생 횟수가 증가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한 국가가 상대방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고려할 때, 상대적 군사력, 다시 말해서 적·아의 군사력 수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정치학에서 세력전이(power transition) 이론으로 대표되는 많은 연구들에서 분쟁 당사국 간 상대적 국력 차이가 군사적 충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해 왔고, 이런 연구들의 대부분은 분쟁 당사국 간 국력이 비슷할수록 양국 간 군사적 분쟁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⁵⁷⁾ 왜냐하면 전쟁의 시작 여부는 분쟁 당사국 간 국력의 차이에 의한 승패의 확률이 결정하는데, 분쟁 당사국 간 국력이 비슷할 경우 어느 쪽이 전쟁에서 유리할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쟁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오판 가능성을 증가하여 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분쟁 당사국 간 국력의 차이가 현저할 경우 어느 쪽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은지 명확하기 때문에 전쟁의 발생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의 군사력이 다른 국가를 압도할 경우 군사력이 강한 국가는 현 상태(status quo)에 만족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동기가 없고, 반대로 군사력이 약한 국가는 현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군사력의 약세로 인해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⁵⁸⁾ 이 논리를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분쟁에 적용시키면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분쟁 당사국 간 해군력의 차이가 클 경우, 다시 말해서 어느 한쪽의 해군력이 상대방을 압도할 경우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분쟁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두 번째 가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가설 2: 해양관할권 분쟁 당사국 간 해군력 차이가 커질수록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양국 간 군사적 분쟁 발생 횟수는 감소한다.

57) Douglas Lemke and Suzanne Werner, "Power Parity, Commitment to Change, and War,"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40, No.2(1996), p.236.

58) Jack Levy and William Thompson, *Causes of War* (Hoboken: Wiley-Blackwell, 2010), pp.41-42.

V. 연구설계

앞서 언급한 가설들을 증명하기 위해, 이 연구는 ICOW 데이터를 바탕으로 1900년부터 2001년까지 서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 간에 발생한 해양관할권 분쟁을 분석했다.⁵⁹⁾ ICOW 데이터는 해양관할권 분쟁 별로 해양관할권 분쟁의 특징(해양관할권 분쟁의 중요성 등) 뿐만 아니라 매년 분쟁 당사국 간 평화적 해결 시도, 군사적 분쟁 발생 횟수 등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연구의 분석의 단위(unit of analysis)는 해양관할권 분쟁 dyad-year⁶⁰⁾이다.

1. 종속변수

이번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해양관할권 분쟁 당사국 간 특정 년도에 발생한 군사적 분쟁(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MIDs) 횟수이다. 군사적 분쟁(MIDs)은 국가 간 분쟁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COW(Correlates of War) 데이터의 일부로써 무력사용의 위협을 포함한 저강도 분쟁에서부터 전쟁을 포함한 고강도 분쟁까지 국가 간 발생한 군사적 분쟁 횟수를 측정하는 것이다.⁶¹⁾ 예를 들면, 포클랜드섬을 둘러싼 분쟁의 경우 1980년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MIDs 발생 횟수, 1981년의 MIDs 발생 횟수, 1982년의 MIDs 발생 횟수가 이번 연구의 종속변수가 되는 것이다. 해당 자료는 ICOW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종속변수를 측정했다. 종속변수의 최대값은 2, 즉 해양관할권 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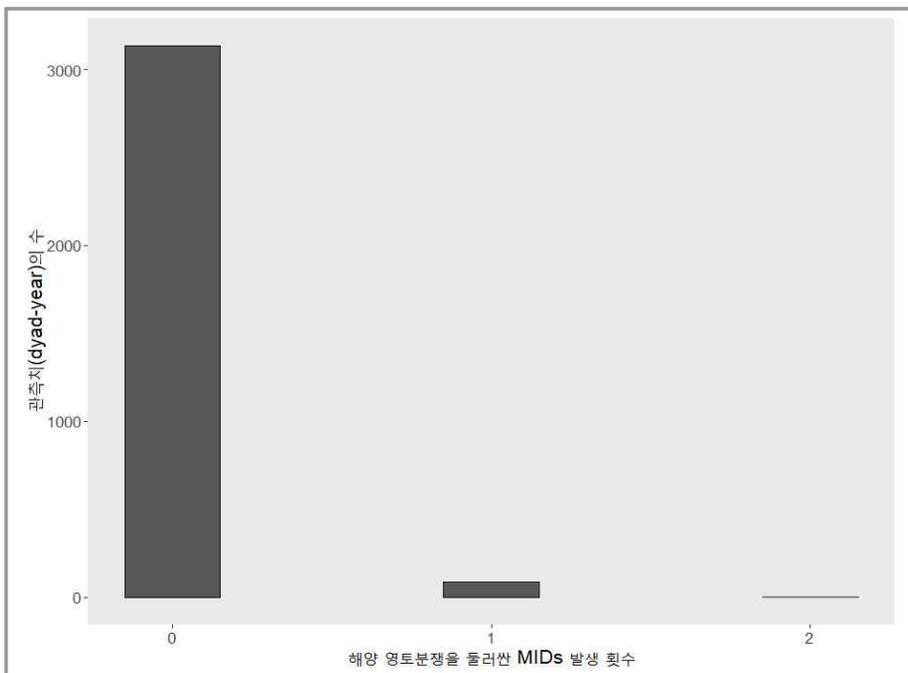
59) 현재 ICOW 데이터가 보유한 해양관할권 분쟁 자료는 서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 간 해양관할권 분쟁으로 국한되어 있다. 아시아, 중동 지역 국가들 간에 발생한 해양관할권 분쟁 자료는 현재 수집 중에 있다.

60) 여기서 dyad란 2개의 분쟁 당사국을 의미하고, year는 특정 년도이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2개의 dyads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한국과 일본의 2018년과 한국과 중국의 2018년은 시간적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2018년이지만 dyad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dyad-year이 된다. Dyad-year는 국가 간 분쟁 연구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분석단위(unit of analysis)이다.

61) MIDs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Daniel Jones, Stuart Bremer, and David Singer,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1816-1992: Rationale, Coding Rules, and Empirical Patterns,"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15(1996), pp.163-213. 참고.

dyad-year에서 MIDs가 가장 많이 발생한 횟수는 2회이며, 최소값은 0이다. <그림 1>은 종속변수의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약 97%)의 해양관할권 분쟁 dyad-year가 0의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며, 이것은 대부분의 해양관할권 분쟁에서 MIDs의 발생이 매우 낮다는 의미이다.

<그림 1> 종속변수(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MIDs 발생 횟수)의 분포



2. 독립변수

이번 연구의 독립변수는 2개로, 해양관할권 분쟁 당사국의 군사력 투사 가능 “해군력 보유 여부”와 해양관할권 분쟁 당사국 간 “해군력 차이”이다. 해군력 측정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해군 주력함의 숫자에 기반한 모델스키(Modelski)와 톰슨(Thompson)의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들은 해군력 발전에 영향을 주는 전통적인 요소들, 예를 들면 국방비나 병력의 수 등은 해군력의 측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해군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군사력 투사능력을 고려하여 특정 국가가 보유한 주력함의 숫자가 해군력을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라고 주장했다.⁶²⁾ 하지만, 모델스키(Modelski)와 톰슨(Thompson)의 해군력 데이터는 오직 강대국들만 포함하고 있고, 그 기간도 제한적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해군력 자료는 오직 해군 주력함의 숫자만 고려했기 때문에 해군력의 질(quality)적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이 연구는 해군력을 해군 전투함의 총 톤수로 측정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총 톤수가 무거운 전투함일수록 강력한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장기간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사력 투사를 위한 해군력의 질적 요소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국가가 보유한 해군 전투함의 총 톤수를 측정하기 위해 이번 연구는 크리셔(Crisher)와 수바(Souva)의 해군력 데이터를 사용했다. 크리셔(Crisher)와 수바(Souva)의 해군력 데이터는 1865년부터 2011년까지 총 73개 국가의 해군 전투함의 숫자 뿐만 아니라 총 톤수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그들은 해전에서 전술과 무기체계 발달에 따라 해군의 역사를 4단계 구분한 후, 각 단계별로 해군력 측정을 위해 다른 기준을 적용했지만, 군사력 투사능력을 갖추지 않은 함정을 제외하기 위해 모든 기간에 적용되는 최소의 기준(1,000톤 이상의 전투함)을 적용했다.⁶³⁾ 다시 말해서 크리셔(Crisher)와 수바(Souva)의 해군력 데이터에 특정 국가가 특정 년도에 포함되었다는 의미는 해당 국가가 군사력 투사가 가능한(1,000톤 이상의 전투함) 해군력을 보유했다는 의미이다.

크리셔(Crisher)와 수바(Souva)의 해군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첫 번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독립변수인 “해군력 보유 유무”는 이진(binary) 변수⁶⁴⁾로, 분쟁 당사국 양쪽 모두가 군사력 투사가 가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측정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특정 년도에 크리셔(Crisher)와 수바(Souva)의 해군력 데이터에 특정 국가의 해군력이 수록되어 있다면 해당 국가는 군사력 투사가 가능한 해군력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양관할권 분쟁 dyad-year에 해양관할권 분쟁 당사국 모두가 크리셔(Crisher)와 수바(Souva)의 해군력 데이터에 해군력이 수록되어 있다면, 이는 분쟁 당사국 모두가 군사력 투사가 가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 경우는 1로 부호화(coding)했다. 반대로, 분쟁 당사국 중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 군사력 투사가 가능한 해군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0으로 부호화했다. 해당 변수의 경

62) George Modelski and William Thompson, *op. cit.*, pp.28-33.

63) Brian Benjamin Crisher and Mark Souva, *op. cit.*, p.606.

64) 0과 1로 부호화(coding)된 변수를 말한다.

우 약 57%의 표본(1,830개)이 1, 즉 분쟁 당사국 모두 해군력을 보유한 경우로 나타났다.

두 번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독립변수인 해양관할권 분쟁 당사국 간 “상대적 해군력”은 국가 간 분쟁 연구에 있어 분쟁 당사국 간 상대적 국력의 차이를 계산할 때 흔히 사용되는 방법을 적용하여 아래의 식에 따라 측정했다.

$$\text{상대적 해군력} = \frac{\text{분쟁 당사국 중 강한 해군력을 보유한 국가의 해군 전투함 총 톤수}}{\text{분쟁 당사국 양측이 보유한 해군 전투함 총 톤수}}$$

상대적 해군력의 최대값은 1이며, 이 경우는 분쟁 당사국 중 한쪽만 해군력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해군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로 한쪽이 압도적인 해군력을 보유한 경우이다. 최소값은 0.5이며 이 경우는 분쟁 당사국이 서로 동일한 해군력을 보유한 경우이다.⁶⁵⁾

3. 통제변수

기존 연구들에서 이미 확인된 해양관할권 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통제변수로 포함했다. 첫째, “유엔 해양법 협약”의 경우 앞서 많은 연구⁶⁶⁾들에서 언급되었듯이 유엔 해양법 협약 자체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등 해양관할권 분쟁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들을 정의하고 있고, 해양의 관리와 사용에 대한 각종 평화적 절차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해양법 협약 채택 자체가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분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이 1982년에 채택되었기 때문에 1982년 이전 년도는 0, 이후 년도는 1로 설정했다.

둘째, “사안의 중요성(issue salience)”도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분쟁 당사국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헨슬 외(Hensel et al.)의 연구는 분

65) 상대적 해군력을 측정함에 있어 분쟁 당사국 모두 해군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396개)는 계산식에 따라 분모가 0이 되어 상대적 해군력이 측정될 수 없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66) Stephen Nemeth, Sara Mitchell, Elizabeth Nyman, and Paul Hensel, *op. cit.*; and Andrew Owsiak and Sara Mitchell, *op. cit.* 참고.

쟁 당사국이 영토분쟁 자체가 중요할수록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평화적 수단 뿐만 아니라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⁶⁷⁾ 해양관할권 분쟁 자체의 중요성을 측정하기 위해 ICOW 데이터는 6가지 지표들을⁶⁸⁾ 이용하여 해양관할권 분쟁 자체가 분쟁 당사국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해양관할권 분쟁 지역이 분쟁 당사국에 중요할수록 해당 국가는 더 적극적으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분쟁 당사국이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인지를 보여주는 “민주주의 수준”을 통제변수로 포함했다. 민주 평화론으로 대표되는 많은 연구들은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해양관할권 분쟁 관련 연구에서도 분쟁 당사국들이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이면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분쟁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다.⁶⁹⁾ 분쟁 당사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POLITY IV 데이터를 이용하여 측정했고, POLITY IV 데이터의 민주주의 지표가 분쟁 당사국 모두가 6 이상이면 1(분쟁 당사국 모두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 그렇지 않으면 0으로 부호화했다. 분쟁 당사국 모두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이면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분쟁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과거 군사적 분쟁(MIDs) 경험”을 포함했다. 딜(Diehl)과 겔츠(Goertz)가 주장한 것처럼 영토분쟁을 둘러싼 과거 군사적 분쟁은 미래 군사적 분쟁 가능성을 증가시킨다.⁷⁰⁾ 이와 관련해서 헨슬 외(Hensel et al.)의 연구는 과거 동일한 영토분쟁으로 분쟁 당사국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경우, 분쟁 당사국 간 미래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⁷¹⁾ 과거 군사적 분쟁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네메스 외(Nemeth et al.)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을 적용했다. 1년 전 발생한 군사적

67) Paul Hensel, Sara Mitchell, Thomas Sowers, and Clayton Thyne, *op. cit.*, pp.132-138.

68) 6가지 지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관할권 분쟁 지역이 분쟁 당사국의 본토인지 아닌지, 둘째, 해양관할권 분쟁 지역에 천연자원이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셋째, 해양관할권 분쟁 지역이 분쟁 당사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지, 넷째, 어로 자원의 존재 유무, 다섯째, 이동하는 어군의 존재, 여섯째, 육지 영토분쟁과 관련성이다.

69) Paul Hensel, Sara Mitchell, Thomas Sowers, and Clayton Thyne, *op. cit.*; and Á Aslaug Asgeirsd Óttir and Martin Steinwand, “Distributive Outcomes in Contested Maritime Areas: The Role of Inside Options in Settling Competing Claim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November 21(2016) 참고.

70) Paul Diehl and Gary Goertz, *War and Peace in International Rivalr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pp.151-155.

71) Paul Hensel, Sara Mitchell, Thomas Sowers, and Clayton Thyne, *op. cit.*, pp.132-138.

분쟁의 경우는 1로 설정되며, 이후 1년이 경과할 때 마다 10%씩 감소시키는 방법이다.⁷²⁾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싸고 과거 군사적 분쟁 경험이 있었을 경우 당사국 간 군사적 분쟁 가능성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분쟁 당사국 간 공통으로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구 또는 조약의 수”를 포함했다. 분쟁 당사국 간 국제기구나 조약에 공통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이 많다면, 국제기구나 조약에서 제공하는 각종 분쟁해결 수단 또는 정보교환 수단을 이용하여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Multilateral Treaties of Pacific Settlement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쟁 당사국이 공통으로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조약의 수를 측정했다. 분쟁 당사국이 공통으로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구나 조약의 수가 많을수록, 군사적 분쟁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4. 통계모델

종속변수가 특정기간 동안 발생한 분쟁 당사국 간 군사적 분쟁 발생 횟수, 즉 사건의 발생 횟수이므로 포아송 회귀분석(Poisson regression)이나 음이항 회귀분석(Negative binomial regression) 중 하나의 분석 방법이 적합한 통계 모델이 될 것이다.⁷³⁾ 이 두 가지 모델의 선택 기준 중 하나는 포아송 회귀분석을 사용하기 위한 중요한 가정을 표본이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음이항 회귀분석과 비교할 때 포아송 회귀분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Equidispersion의 가정, 즉 조건부 분산(conditional variance)과 조건부 평균(conditional mean)이 같다는 가정을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해양관할권 분쟁 데이터가 이러한 가정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모델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Equidispersion 가정을 만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포아송 회귀분석을 사용할 경우 선형 회귀분석에서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⁷⁴⁾ 카메론

72) Stephen Nemeth, Sara Mitchell, Elizabeth Nyman, and Paul Hensel, *op. cit.*, p.13.

73) Colin Cameron and Pravin Trivedi, *Regression Analysis of Count Data, 2nd edi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p.1-20.

74) Colin Cameron and Pravin Trivedi, “Regression Based Tests for Overdispersion in the Poisson Model,” *Journal of Econometrics*, Vol.46, No.3(1990), pp.347-364.

(Cameron)과 트리베디(Trivedi)의 연구를 바탕으로 Equidispersion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P > 0.509$ 로 표본의 분포가 Equidispersion의 가정을 만족한다는 귀무가설⁷⁶⁾을 기각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표본이 Equidispersion의 가정을 만족한다는 가정, 즉 포아송 회귀분석이 적합하다는 가정을 기각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해양관할권 분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포아송 회귀분석이 적합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사건 간 독립성 여부이다. 포아송 회귀분석 자체는 사건 간 독립을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 간 독립은 매우 이상적인 경우이다. 예를 들어, 1958년~1961년 동안 발생한 제 1차 대구전쟁의 경우 1958년의 상황이 1959년의 상황과 관련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고, 제 1차 대구전쟁이 1972년~1973년 동안 발생한 제 2차 대구전쟁과 관련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독립의 가정은 실제 상황에서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카메론(Cameron)과 밀러(Miller)가 언급했듯이 이번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dyad 수준의 분석에서 표본 간 독립의 가정에 대한 적절한 오류 수정 없이는 표준오차가 과소평가(underestimated)되어,⁷⁷⁾ 가설 검증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독립의 가정으로 인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를 사용했다. 왜냐하면 미셸(Mitchell)과 트럼보어(Trumbore)의 연구가 보여주는 것처럼 군집 표준오차의 사용은 동일한 dyad에서 발생 가능한 다수의 해양관할권 분쟁 간 비 독립의 가능성이나, 동일한 해양관할권 분쟁 내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 간 의존 가능성을 감소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⁷⁸⁾

75) 귀무가설이 옳다는 가정 하에 얻어진 검정통계량이 실제 관측치 보다 더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확률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귀무가설을 지지하는 정도로, P값이 작을수록 귀무가설을 지지하는 정도가 약하므로 귀무가설을 기각(reject)하게 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76) 귀무가설(Null hypothesis)이란 가설 검정 시 연구자가 기각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설이다.

77) Colin Cameron and Douglas Miller, "A Practitioner's Guide to Cluster-Robust Inferenc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50, No.2(2015), pp.317-373.

78) Sara Mitchell and Peter Trumbore, "Rogue States and Territorial Disputes,"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31, No.3(2014), pp.323-339.

VI. 연구 결과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 연구의 목적은 해군력이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분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표 2>는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이며, [모델 1]은 독립변수만 포함한 모델이며, [모델 2]의 경우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모두 포함한 모델이다. 여기서 [모델 1], 즉 독립변수만 포함한 모델을 포함시킨 이유는 카데라(Kadera)와 미첼(Mitchell)의 연구(2005)가 보여준 것처럼 연구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 임의적으로 어떤 변수(특히, 통제변수)를 포함 또는 제외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독립변수 그 자체만으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⁷⁹⁾ 다시 말해서 독립변수의 유의미한 결과가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간 상호작용에 의한 허위의 가능성에 기인하는 것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함이다.

포아송 분석 결과 해석을 위해 [모델 2]의 “해군력 보유 여부” 변수를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모델 2]에서 해군력 보유 여부 변수의 0.607은 회귀계수(coefficient)이며, 이는 독립변수인 해군력 보유 여부와 종속변수인 군사적 분쟁 발생 횟수와의 관계를 설명해준다. 구체적으로 0.607 앞에 생략된 양(+)의 의미는 해군력 보유 여부와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분쟁 발생 횟수 간에는 양의 관계, 즉 분쟁 당사국 양쪽 모두가 군사력 투사가 가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분쟁 당사국 간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분쟁 발생 횟수는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회귀계수인 0.607의 의미는 <표 3>에서 별도로 설명할 것이다. 다음으로 괄호 안의 0.283은 해군력 보유 여부 회귀계수의 군집 표준오차이며, 이는 해당 변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마지막으로 회귀계수 우측에 표시된 “*”는 P값⁸⁰⁾을 나타낸다. 여기서 “**”는 P값이 0.05보다 작다는 의미이며, 이는 5%

79) Kelly Kadera and Sara Mitchell, “Heeding Ray’s Advice: An Exegesis on Control Variables in Systemic Democratic Peace Research,”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22, No.4(2005), pp.311-326.

80) 여기서 P값은 귀무가설(Null hypothesis), 즉 “해군력 보유 여부(독립변수)와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분쟁 발생 횟수(종속변수)는 통계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가 참이라는 가정 하에서 계산된 검정 통계량이 실제 관측치 보다 더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확률이다. 다시 말해서 귀무가설을 지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경우 계산된 P값, 즉 귀무가설을 지지하는 정도가 낮게 나오면 귀무가설을 기각(reject)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독립변

의 유의수준(오차 가능성)에서 해당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의미이다. 종합적으로, [모델 2]를 기준으로 분쟁 당사국의 “해군력 보유 여부” 변수를 해석하면, 다른 모든 변수들을 상수(constant)로 통제했을 때, 평균적으로 분쟁 당사국 모두가 군사력 투사가 가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해양 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분쟁 당사국 간 군사적 분쟁 발생 횟수는 증가하고, 이는 5%의 유의수준(오차 가능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번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을 잘 뒷받침해 준다. 또한 이런 결과는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만 포함한 [모델 1]에서도 동일하므로, 첫 번째 가설의 통계적 유의성이 통제변수와 조합에 의한 통계적 허위가 아님을 보여준다.

〈표 2〉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모델 1	모델 2 ⁸¹⁾
해군력 보유 여부	0.856** (0.349)	0.607** (0.283)
유엔 해양법 협약		0.055 (0.282)
사안의 중요성		0.121** (0.049)
민주주의 수준		-0.111 (0.270)
과거 군사적 분쟁 경험		0.902*** (0.113)
국제기구/조약 수		0.094** (0.041)
Constant	-4.105*** (0.280)	-5.569*** (0.518)
표본 수	3,226	3,226
LR χ^2 ⁸²⁾	14.43***	84.18***

참고 1. *** : p 값 < 0.01, ** : p 값 < 0.05, * : p 값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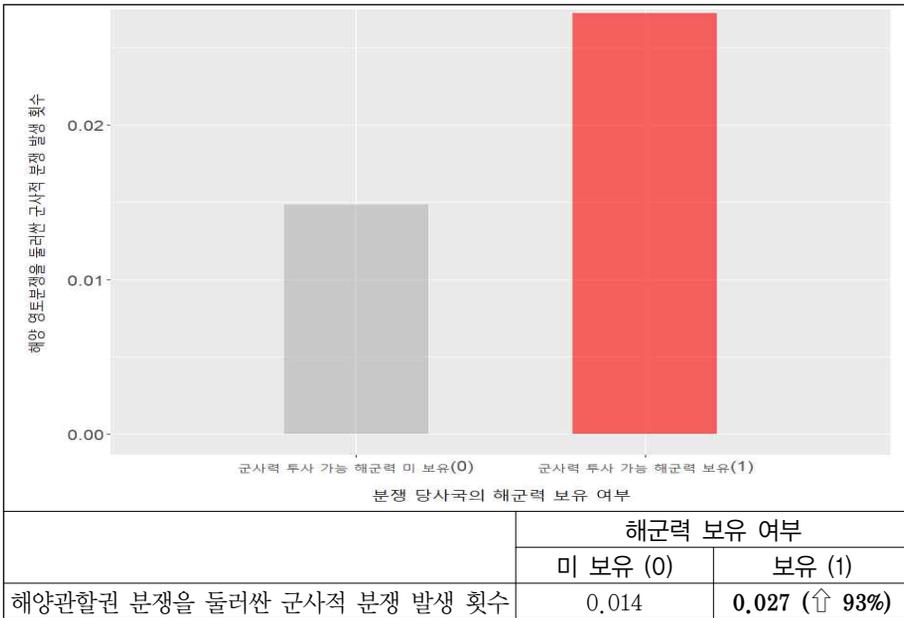
2. 표 안에는 회귀계수(coefficients)와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가 표시되어 있으며, 괄호 안의 숫자는 군집 표준오차임, 양측검정(two tailed test).

수와 종속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때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연구자가 설정하는데, 보통 표에서 “*”의 숫자로 표시된 0.01, 0.05, 0.1을 사용한다.

81) 해당 모델의 경우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 즉 독립변수와 통

포아송 회귀분석은 그 특성상 해군력 보유 여부의 회귀계수인 0.607을 그 자체로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해군력 보유 여부(독립변수)의 변화가 종속변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실제효과(substantive effect)를 계산한다. <표 3>은 해군력 보유 변수의 실제효과를 그래프와 표로 나타낸 것이다. 해군력 보유 여부 변수의 실제효과는 해군력 보유 여부가 이진(dummy) 변수이기 때문에 해당 변수가 0에서 1로 변할 때, 종속변수의 변화량을 측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분쟁 당사국 모두 또는 1개 국가가 군사력 투사가 가능한 해군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의 군사적 분쟁 발생 횟수와 분쟁 당사국 모두 해군력을 보유한 경우의 군사적 분쟁 발생 횟수를 비교한 것이다.⁸³⁾

<표 3> 해군력 보유여부 변수의 실제 효과(substantive effect)



제변수 간 높은 상관계수로 인해 종속변수 추정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안의 중요성 또는 과거 군사적 분쟁 경험이 해군력 보유 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간 상관계수를 확인한 결과 제일 높은 상관계수가 0.16(해군력 보유 여부와 과거 군사적 분쟁 경험 간 상관계수)으로 모델 설계 시 다중공선성을 고려할 정도 높지 않았다.

82) LR χ^2 는 Log-likelihood test 결과로, 모델 자체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준다. Log-likelihood test는 아무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모델(null model)과 독립/통제변수를 포함한 모델을 비교하여 두 모델이 종속변수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비교한 것이다. [모델 1]과 [모델 2]의 LR χ^2 값 모두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모델들이 아무런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모델보다 종속변수를 잘 설명하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83) 해군력 보유 여부 변수의 실제효과를 계산할 때 다른 통제변수는 연속형 변수인 경우에는 평균, 이진 변수인 경우에는 대푯값(0과 1중 많이 나오는 값)으로 설정했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해양관할권 분쟁 당사국이 군사력 투사가 가능한 해군력을 미보유한 상태에서 보유한 상태로 변화할 경우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분쟁 횟수는 93%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 역시 첫 번째 가설을 잘 뒷받침해 준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할 사항은 해군력 보유 여부의 실제효과가 생각 보다 작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해군력 보유 여부에 따라 변화하는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분쟁 발생 횟수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종속변수, 즉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분쟁 발생 횟수 자체가 매우 작은 것(3%)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국가 간 군사적 분쟁의 희귀성(rareness)으로 인해 국가 간 군사적 분쟁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⁸⁴⁾

〈표 4〉는 두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를 해군력의 보유 유무가 아닌 해양관할권 분쟁 당사국 간 “해군력의 차이”로 교체하여 모델을 추정했다. [모델 3]은 독립변수만 포함한 모델이며, [모델 4]의 경우에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모두를 포함했다. [모델 4]에서 알 수 있듯이 분쟁 당사국 간 “해군력의 차이” 변수의 회귀계수는 -1.398 이다. 여기서 음(-)의 의미는 독립변수(분쟁 당사국 간 해군력 차이)와 종속변수(군사적 분쟁 발생 횟수) 간 관계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분쟁 당사국간 해군력의 차이가 증가할수록,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분쟁 발생 횟수는 감소한다는 것이며, 이는 10%의 유의수준(오차 가능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종합적으로 다른 모든 변수들을 상수(constant)로 통제했을 때, 평균적으로 분쟁 당사국 간 해군력이 차이가 커질수록 당사국 간 군사적 분쟁 발생 횟수는 감소한다는 것이며, 이는 10%의 유의수준(오차 가능성)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번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을 잘 뒷받침 해준다. 또한 이런 결과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만 포함한 [모델 3]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두 번째 가설의 통계적 유의성이 통제변수와 조합에 의한 통계적 허위가 아님을 보여준다.

84) Mark Crescenzi, Kelly Kadera, and Sara Mitchell, *op. cit.*, p.1084.

〈표 4〉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모델 3	모델 4
해군력 차이	-2.815** (1,212)	-1.398* (0.721)
유엔 해양법 협약		-0.218 (0.288)
사안의 중요성		0.108** (0.050)
민주주의 수준		-0.274 (0.245)
과거 군사적 분쟁 경험		0.870*** (0.097)
국제기구/조약 수		0.078* (0.043)
Constant	-1.042 (1,107)	-3.536*** (0.791)
표본 수	2,830 ⁸⁵⁾	2,830
LR χ^2	17.51***	7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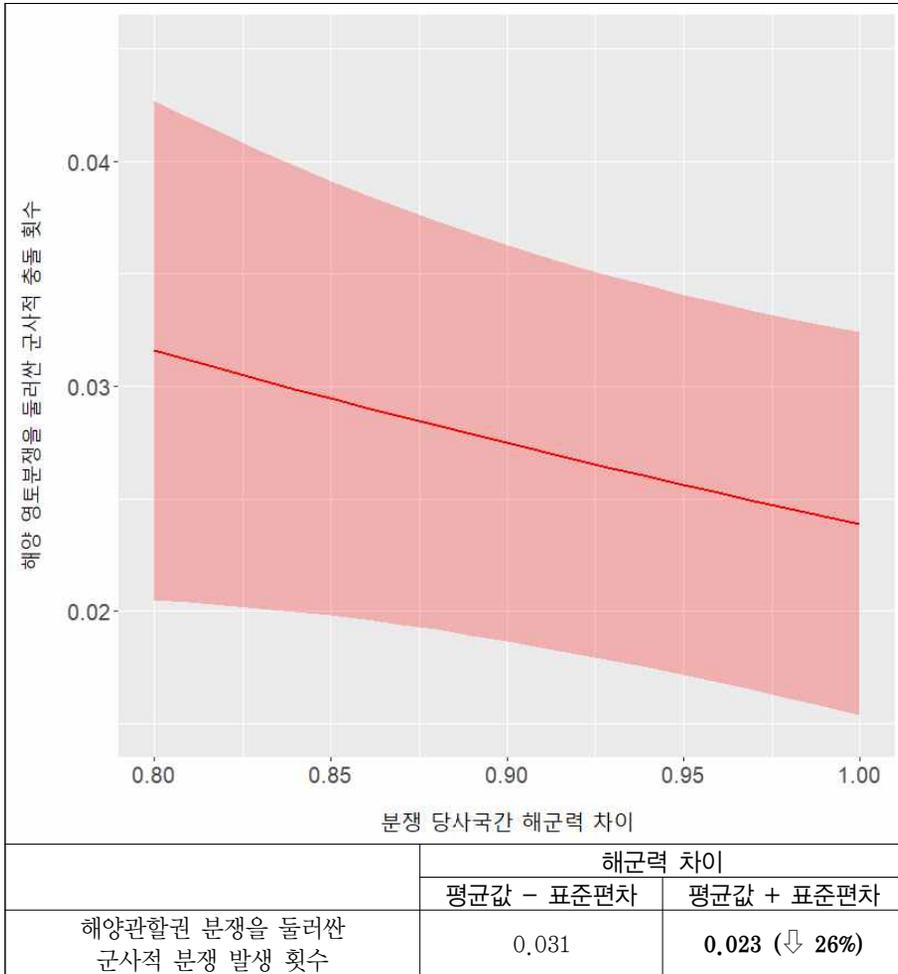
참고 1. *** : p 값 < 0.01, ** : p 값 < 0.05, * : p 값 < 0.1

2. 표 안에는 회귀계수(coefficients)와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가 표시되어 있으며, 괄호 안의 숫자는 군집 표준오차임, 양측검정(two tailed test).

〈표 5〉는 분쟁 당사국 간 해군력 차이 변수의 실제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보통 연속형 변수(이 경우 분쟁 당사국 간 해군력 차이)의 실제 효과를 측정할 때는, 해당 변수가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뺀 값에서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더한 값까지 변화할 때 종속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측정한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분쟁 당사국 간 해군력 차이가 평균값에서 표준편차를 뺀 값에서 평균값에서 표준편차를 더한 값까지 증가할 때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분쟁 발생 횟수가 26%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역시 두 번째 가설을 잘 뒷받침해 준다.

85)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대적 해군력을 측정함에 있어 분쟁 당사국 모두 해군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396개)는 계산식에 따라 분모가 0이 되어 상대적 해군력 차이가 측정될 수 없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모델 3·4의 표본 수가 모델 1·2의 표본 수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표 5〉 해군력의 차이 변수의 실제 효과(substantive effect)



[모델 4]를 기준으로 통제변수의 결과를 간략히 설명하면([모델 2]도 결과는 유사하다), 예상대로 사안의 중요성이 증가할수록, 즉 해양관할권 분쟁 지역에 분쟁 당사국에게 중요할수록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분쟁 당사국 간 군사적 분쟁 횟수가 증가하며, 이는 5%의 유의수준(오차 가능성)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과거 군사적 분쟁 경험의 경우에도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과거 군사적 분쟁 경험은 분쟁 당사국 간 군사적 분쟁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이는 1%의 유의수준(오차 가능성)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엔 해양법 협약과 분쟁 당사국의 민주주의 수준도 분쟁 당사국 간 군사적 분쟁 발생 횟수를 감소시키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마지막으로 예상과는 달리, 분쟁 당사국 간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기구 또는 조약의 수는 오히려 분쟁 당사국 간 군사적 분쟁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VII. 제한사항 및 결론

해군력이 해양을 둘러싼 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해양관할권 분쟁 연구에서는 해군력이 해양관할권 분쟁에 어떠한 미치 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 단순한 사례 연구를 넘어 ICOW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광범위한 표본을 통해 좀 더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를 통해,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분쟁 당사국 모두가 군사력 투사가 가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분쟁 당사국 간 군사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분쟁 당사국이 보유한 해군력의 차이가 커질수록, 다시 말해서 어느 한쪽 국가의 해군력이 상대국의 해군력을 압도할 때,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분쟁 가능성은 감소한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제한사항을 내포하고 있고, 추후에는 이러한 제한사항을 중심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번 연구는 분쟁 당사국 중 어느 쪽이 먼저 군사적 분쟁을 시작하는지에 대한 의문에는 답을 주지 못한다. 세력전이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 중 하나는 현 상태(status quo)에 불만족하는 국가가 세력전이 현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분쟁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현 상태에 불만족하는 국가가 힘이 증가하여 패권국의 힘에 근접하면 군사적 분쟁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분쟁 당사국 간 힘의 차이가 줄어들면, 군사적 분쟁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지, 누가 분쟁을 시작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어떤 국가가 군사적 분쟁을 먼저 시작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결측치(missing value)와 관련해서, 크리셔(Crisher)와 수바(Souva)의 해군력 데이터는 군사력 투사능력을 갖춘 해군력만 포함하기 위해 1,000톤 이상의 해군전투함을 보유한 국가만 데이터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해양관할권 분쟁 당사국들 중에서 1,000톤 이상의 해군함을 보유하지 않았지

만, 그 이하 톤수의 해군함정을 보유한 국가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396개)는 자료수집의 한계로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차후 연구는 추가적인 해군력 데이터 수집을 통해 결측치 발생을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적으로 볼 때 이번 연구의 대상은 서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로 한정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남중국해 분쟁 등 해양관할권 분쟁을 연구함에 있어 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ICOW 데이터는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 대한 해양관할권 분쟁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추후 ICOW 데이터가 아시아와 중동 지역으로까지 확장되어 모델에 포함될 수 있다면, 더 일반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는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분쟁 가능성을 해군력이라는 변수로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했고, 이번 연구를 통해 해군력이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 연구가 한국해군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현재 한국은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분쟁, 중국과 이어도를 둘러싼 분쟁 등 인접국들과 해양관할권 분쟁을 겪고 있다. 또한 북방한계선(NLL)이 우리나라와 북한의 해상 경계선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ICOW 데이터의 정의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북한 역시 NLL을 둘러싸고 해양관할권 분쟁 중인 것으로 여겨진다. 크리셔(Crisher)와 수바(Souva)의 해군력 데이터를 기준으로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일본은 군사력 투사가 가능한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한 국가들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1950년 이후, 북한의 경우도 1973년 이후 군사력 투사가 가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첫 번째 가설에 적용시켜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와 해양관할권 분쟁 중인 분쟁 당사국(중국, 일본, 북한) 모두가 군사력 투사가 가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렇지 않은 해양관할권 분쟁과 비교할 때 독도, 이어도, NLL을 둘러싼 해양관할권 분쟁은 군사적 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력 분쟁 발생 확률이 높은 해양관할권 분쟁을 겪고 있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가 군사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해양관할권 분쟁을 겪고 있다면, 군사적 분쟁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까? 바로 두 번째 가설이 그 해답을 제시한다. 두 번째 가설이 말해주듯이 해양관할권 분쟁 당사국 중 어느 한쪽 국가가 상대국에 대한 압도적인 해군력 유지할수록 해양관할

권 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분쟁 가능성은 감소한다. 이는 마한(Mahan)이 언급한 것처럼 전쟁보다는 억제가 더 선호되고 억제를 위해서는 더 강력한 해군력 우세가 필요하다는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보다 우월한 해군력 보유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NLL을 둘러싸고 북한과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 압도적 해군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는 통일 이후 북한이라는 직접적인 위협이 없어진 상황에서도 일본, 중국 등과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왜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번 연구에서 강력한 해군력 유지가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분쟁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쟁 당사국 모두가 강력한 해군력 보유를 추진할 경우 안보 딜레마 상황에 빠져 오히려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는 해양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군력 건설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해군력, 상대국의 민주주의 수준, 상대국의 유엔 해양법 협약 가입 여부, 국제기구의 역할 등과 같이 군사적 분쟁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학술 저널

- Á Asgeirsd Óttir, Á Aslaug and Martin Steinwand, “Distributive Outcomes in Contested Maritime Areas: The Role of Inside Options in Settling Competing Claim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November 21(2016).
- Bolks, Sean and Richard Stoll, “The Arms Acquisition Process: The Effect of Internal and External Constraints on Arms Race Dynamic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44, No.5(2000).
- Bouchat, Clarence, *Dangerous Ground: The Spratly Islands and U.S. Interests and Approaches*, Carlisl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and U.S. Army War College Press, 2013.
- Boulding, Kenneth, *Conflict and Defense: A General Theory*, New York: Harper and Bros., 1962.
- Cameron, Colin and Pravin Trivedi, “Regression Based Tests for Overdispersion in the Poisson Model,” *Journal of Econometrics*, Vol.46, No.3(1990).
- Cameron, Colin and Pravin Trivedi, *Regression Analysis of Count Data, 2nd edi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 Cameron, Colin and Douglas Miller, “A Practitioner’s Guide to Cluster-Robust Inferenc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50, No.2(2015).
- Clausewitz, Carl von, *On War*. Edited and translated by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1832].
- Codebook for Maritime Claims Data Issue Correlates of War(ICOW) Project (2002).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 –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Washington, D.C.: CRS, 2017.
- Corbett, Julian, *Some Princes of Maritime Strategy*, New York: Longmans, Green and Co, 1911.
- Crescenzi, Mark, Kelly Kadera, and Sara Mitchell, “A Supply Side Theory of Media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55, No.4(2011).
- Crisher, Brian Benjamin and Mark Souva, “Power at Sea: A Naval Power Dataset, 1865–2011,”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40(2015).
- Crisher, Brian Benjamin, “Naval Power, Endogeneity, and Long Distance

- Disputes,” *Research and Politics*, January–March(2017).
- Daniels, Kelly and Sara Mitchell, “Bones of Democratic Contention: Maritime Disputes,”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Vol.20, No.4(2017).
- Diehl, Paul, *A Road Map to War: Territorial Dimensions of International Conflicts*, Nashville: Vanderbilt University Press, 1999.
- Diehl, Paul and Gary Goertz, *War and Peace in International Rivalr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 Donaldson, John and Alison Williams, “Understanding Maritime Jurisdictional Dispute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59, No.1(2005).
- Dougherty, Christopher, *Introduction to Econometrics(4th e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Druce, Stephen and Efri Yoni Baikoeni, “Circumventing Conflict: The Indonesia–Malaysia Ambalat Block Dispute,” In Mikio Oishi(ed.) *Contemporary Conflicts in Southeast Asia*, New York: Springer, 2016.
- Fravel, Taylor, “China’s Strategy in the South China Sea,”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33, No.3(2011).
- Gompert, David, *Sea Power and American Interests in the Western Pacific*, 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2013.
- Gooch, John, “Maritime Command: Mahan and Corbett,” In Colin Gray and Roger Barnett(ed.) *Seapower and Strategy*, Mary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9.
- Hansen, Holley, Sara Mitchell and Stephen Nemeth, “IO Mediation of Interstate Conflicts: Moving beyond the Global versus Regional Dichotomy,”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52, No.2(2008).
- Hensel, Paul, “Contentious Issues and World Politics: The Management of Territorial Claims in the Americas, 1816–1992,”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45(2001).
- Hensel, Paul, Sara Mitchell, Thomas Sowers, and Clayton Thyne, “Bones of Contention: Comparing Territorial, Maritime, and River Issu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52, No.1(2008).
- Hensel, Paul and Sara Mitchell, “From Territorial Claims to Identity Claims: The Issue Correlates of War (ICOW) Project,”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34, No.2(2017).
- Hosti, Kalevi, *Peace and War: Armed Conflicts and International Order, 1648–198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 Johnson, Dominic and Monica Duffy Toft, "Grounds for War: The Evolution of Territorial Conflict," *International Security*, Vol.38(2013/14).
- Jones, Daniel, Stuart Bremer, and David Singer, "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1816-1992: Rationale, Coding Rules, and Empirical Patterns,"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15(1996).
- Kadera, Kelly and Sara Mitchell, "Heeding Ray's Advice: An Exegesis on Control Variables in Systemic Democratic Peace Research,"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22, No.4(2005).
- Klein, Natalie, *Maritime Security and the Law of the Se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Koo, Min-Gyo, *Island Disputes and Maritime Regime Building in East Asia*, New York: Springer, 2010.
- Kraska, James, *Maritime Power and the Law of the Se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Lektzian, David, Brandon Prins, and Mark Souva, "Territory, River, and Maritime Claims in the Western Hemisphere: Regime type, Rivalry, and MIDs, 1901 to 2000,"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54, No.4(2010).
- Lemke, Douglas and Suzanne Werner, "Power Parity, Commitment to Change, and War,"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40, No.2(1996).
- Lemke, Douglas, *Regions of War and Pea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Levy, Jack and William Thompson, *Causes of War*, Hoboken: Wiley-Blackwell, 2010.
- Liddell Hart, B. H., *Strategy, Second Revised Edition*, New York: Fredrick A. Praeger, 1967.
- Lykke, Arthur, "Toward an Understanding of Military Strategy," In Joseph Cerami and James Holcomb(ed.) *U.S. Army War College Guide to Strategy*, US Army War College Press, 2001.
- Mahan, Alfred Thayer,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87.
- Markowitz, Jonathan and Cristopher Fariss, "Going the Distance: The Price of Projecting Power,"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39, No.2(2013).
- Mearsheimer, John,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orton, 2014.
- Mitchell, Sara and Paul Hensel,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Compliance

- with Agreement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51, No.4(2007).
- Mitchell, Sara and Peter Trumbore, “Rogue States and Territorial Disputes,”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31, No.3(2014).
- Modelski, George and William Thompson, *Seapower in Global Politics, 1494-1993*,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8.
- Nemeth, Stephen, Sara Mitchell, Elizabeth Nyman, and Paul Hensel, “Ruling the Sea: Managing Maritime Conflicts through UNCLOS and Exclusive Economic Zones,”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40, No.5(2014).
- Nyman, Elizabeth, “Oceans of Conflict: Determining Potential Areas of Maritime Disputes,” *SAIS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33, No.3(2013).
- Nyman, Elizabeth, “Offshore Oil Development and Maritime Conflict in the 20th Century: A Statistical Analysis of International Trends,” *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Vol.6(2015).
- Ostrom, Elinor,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Owsiak, Andrew and Sara Mitchell, “Conflict Management Regimes and the Management of Land, River, and Maritime Claims,”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2017).
- Senese, Paul, “Geographic Proximity and Issue Salience: The Effects on the Escalation of Militarized Conflict,”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15, No.2(1996).
- Singer, David, “Reconstructing the Correlates of War Dataset on Material Capabilities of States, 1816-1985,”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14(1987).
- Storey, Ian and You Ji, “China’s Aircraft Carrier Ambitions: Seeking the Truth from the Rumors,” *Naval War College Review*, Vol.57, No.1(2004).
- Till, Geoffrey, *Seapower: A Guid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2 edition)*, New York: Routledge, 2009.
- Valencia, Mark and Nazery Khalid, “The Sulawesi Sea Situation: Stage for Tension or Storm in a Teacup?,” *The Asia-Pacific Journal* (January 28, 2009).
- Vasquez, John, *The War Puzzle Revisit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2. 인터넷

U.S. Department of Defense, “Freedom of Navigation (FON) Program,”
<http://policy.defense.gov/OUSDP-Offices/FON> (검색일: 2018. 5.29.).

“Angry China Shadows U.S. Warship near Man-made Islands,” <https://www.reuters.com/article/us-southchinasea-usa/angry-china-shadows-u-s-warship-near-man-made-islands-idUSKCN0SK2AC20151027/>
(검색일: 2018. 7.16.).

“Beijing Rejects Tribunal's Ruling in South China Sea Case,”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6/jul/12/philippines-wins-south-china-sea-case-against-china/> (검색일: 2017. 7.16.).

<http://data.icow.org>(ICOW data 홈페이지).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Naval Power upon the Resolution of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Han, Jong Hwan*

As the South China Sea maritime dispute illustrates, when considering the place where maritime claims occur, states do not have many choices to respond to maritime claims in which disputed areas are located far away from the land and are surrounded by the sea. As Mearsheimer (2014) points out, the sea stops power projection. Therefore, in order to adopt coercive as well as peaceful settlement policies to deal with maritime claims, states need to overcome obstacles (the sea) to project power. It means that if states want to conduct a specific foreign policy action, such as negotiating maritime borderlines or arguing sovereignty on islands, they need a tool (naval power) to coerce or to persuade the opponent. However, there are lack of research that studies maritime claims from the perspective of naval power. This research project fills this gap based on naval power.

How do relative levels of naval power and (dis) parities of naval power influence the occurrence of MIDs over maritime claims? Naval power is a constitutive element during maritime claims. If disputants over maritime claims have required naval power to project their capability, it means that they have the capability to apply various ways, such as aggressive options including MIDs, to accomplish their goals. So, I argue that when two claimants have enough naval power to project their capabilities, the likelihood of MIDs over maritime claims increases. Given that one or both states have a certain level of naval power, how does relative naval power between two claimants

* Navy Headquarters, Lieutenant Commander under doctoral program.

influence the management of maritime claims? Based on the power transition theory, I argue that when the disparities of relative naval power between claimants becomes distinctive, militarized conflicts surrounding maritime territory are less probable.

Based on the ICOW project which codes maritime claims from 1900 to 2001,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Poisson models show if both claimants have projectable naval power, the occurrence of MIDs over maritime claims increases. In addition, the result shows that when disputants maintain similar relative naval powers, they are more likely to initiate MIDs over maritime claims. To put it differently, if naval capabilities' gap between two claimants becomes larger, the probability of the occurrence of MIDs decreases.

Key Words : South China Sea, Maritime Claims, Naval Power, ICOW, MIDs